

KMI 동향분석

VOL.94

2018 AUGUST

발간년월 2018년 8월(통권 제94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진행 중인 '2017-2018 양식어장 영상판독사업'의 결과를 일부 활용하였습니다.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이기영 양식관측팀 연구원

(karry7102@kmi.re.kr/051-797-4510)

백은영 양식관측팀장

(eybaek@kmi.re.kr/051-797-4503)

김대영 수산업관측센터장

(mobydick@kmi.re.kr/051-797-4541)

2017년 우리나라 김 산업은 수출 5억 달러를 처음으로 달성하였으며, 농수산물 가운데 참치에 이어 수출 2위를 차지하였다. 정부는 2024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김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김 산업에 힘을 보태었다.

하지만 호황을 보이던 김 산업에 있어 최근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6월 말 기준 국내 김 재고량은 7,420만 속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동월에 비해 38.7%, 평년에 비해 53.6% 많은 양이다. 이러한 재고 증가는 2018년산 김이 작년산에 비해 2,400만 속이나 늘면서 과잉생산 되었기 때문이다. 과잉생산의 원인은 수출확대로 인한 양식 면허 증가 외에도 불법 양식시설이 무분별하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8년 상반기 수출실적은 작년 동기간에 비해 247만 속이 증가했지만 생산량 증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국내 김 소비가 일정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년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수출 실적이 작년보다 2,000만 속가량이 더 늘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높은 김 재고 수준을 지속할 경우 김 산업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재고 소진 방안을 마련해야하며, 2019년산 김 생산이 또 다시 과잉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첫째, 불법 양식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김 생산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어장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김의 불법시설은 전체의 35.5%를 차지했다. 불법시설은 김의 과잉생산을 가중시키며, 양식면허(준법시설)를 기준으로 수립되는 정부의 수급

정책 실효성을 낮추기 때문에 정비되어야 하며, 관련한 생산자의 의식개선도 동반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김 생산자, 정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가칭)김 수급조절 위원회’를 발족하고, 적정시설, 과잉생산방지, 재고소진 등의 수급조절 대안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해외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김 작황, 생산량 등의 수급상황을 비롯해 태국, 미국, 대만 등 주요수출대상국의 수요변화 등을 체크함으로써 국외 수요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현지화된 제품개발과 맞춤형 마케팅을 실시하여 신규 수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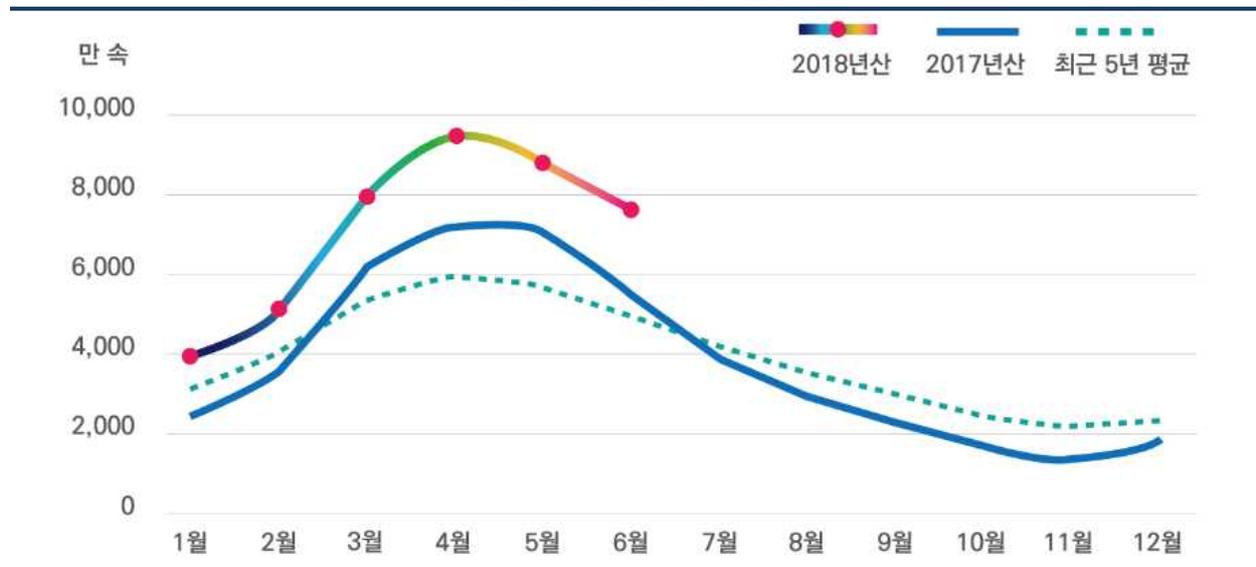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정체된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반찬용 위주의 김 소비에서 간식용이나 안주용으로 이용되는 스낵김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개발이 필요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시식행사 등을 통해 소비를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실정에 맞는 마른김 등급제 도입을 통해 품질제고와 질적 성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김 재고, 과잉 생산으로 큰 폭 증가

■ 국내 김 재고량, 평년보다 5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 2017년은 우리나라 김 산업에 있어 처음으로 수출 5억 달러 달성을 기록한 기념비적인 해였음.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김 산업을 수출주도형 식품산업으로써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2024년까지 1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정부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김 공급과 수요가 안정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성장해야함. 그러나 2018년에는 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아 수급불균형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재고량은 평년보다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8년 6월 말 기준 국내 김 재고량은 7,420만 속으로 작년 동월(5,350만 속)에 비해 38.7%, 평년(4,832만 속)에 비해 53.6%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18년산¹⁾ 어기에서 과잉생산이 된 결과임

그림 1. 국내 김 재고 현황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2018년산 김 생산량, 시설 증가와 작황 호조로 역대 최고 기록

- 2018년산 마른김 생산량은 1억 6,791만 속으로 역대 최고 생산량을 기록했다. 이는 시설량이 작년산보다 14.7% 증가했으며, 어기 중반까지 충남, 전북 등의 지역을 제외하고 작황이 양호했기 때문임²⁾

1) 김 생산 특성에 맞춰 어기에 따라 연산별로 표기(2017년산 : 2016년 10월 ~ 2017년 5월 / 2018년산 : 2017년 10월 ~ 2018년 5월)

- 2018년산 생산량은 2017년산보다 2,400만 속(작년산 대비 16.5% 증가)가량 증가해, 1년 만에 최고 생산량 기록을 갱신했음. 큰 폭의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6월 말 기준 국내 김 재고량은 작년에 비해 약 2,000만 속, 평년에 비해서는 약 2,600만 속이 늘었음

그림 2. 연산별 김 생산량 추이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2018년 상반기 김 수출, 기대 이상의 실적 보였으나 공급 증가에 못 미쳐

- 당초 업계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2018년산 김 생산 회복³⁾으로 작년에 비해 김 수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음. 그러나 2018년 상반기 김 수출량은 3,556만 속으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 246만 속(7.4%)이 늘었으며, 누적 수출금액은 2억 9,989만 달러로 3,136만 달러(11.7%)가 증가했음
- 최근 글로벌 식품으로서 김 위상이 높아지면서 해외 시장으로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내 소비는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작년과 동일한 국내 김 소비를 가정한다면 작년에 비해 2,400만 속가량 증가한 공급량만큼의 수출 수요가 확대되어야만 작년 수준의 재고를 유지할 수 있음
- 즉, 2018년 상반기 김 수출은 작년에 비해 246만 속이 증가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였으나, 2018년산 김의 과잉생산으로 국내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음

2) 2017년산의 경우 어기 중반까지는 주생산지인 전남지역의 작황부진으로 평년보다 생산량이 적었으나, 2월 이후 동아채묘 김 시설 증가, 작황 회복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 역대 최고인 1억 4,416만 속을 기록했음. 2018년산 김 생산량은 1억 6,791만 속으로 충남, 전북 등을 제외하고 특히 주생산지인 전남지역의 작황이 어기 초부터 양호해 역대 최고 생산량이었다던 2017년산 기록을 1년 만에 갱신했음

3) 2017년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김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반사이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김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

표 1. 김 수출동향

(단위: 만 속, 만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전월	증감률	
	6월	누계	5월	6월	누계		작년 동월	누계
수출량	574	3,310	724	792	3,556	9.3	38.0	7.4
수출액	5,110	26,853	5,857	6,551	29,989	11.8	28.2	11.7

주 : 1) 관세청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를 이용해 마른김으로 환산했음(단, 냉장김과 냉동김은 제외)

2) 2018년 6월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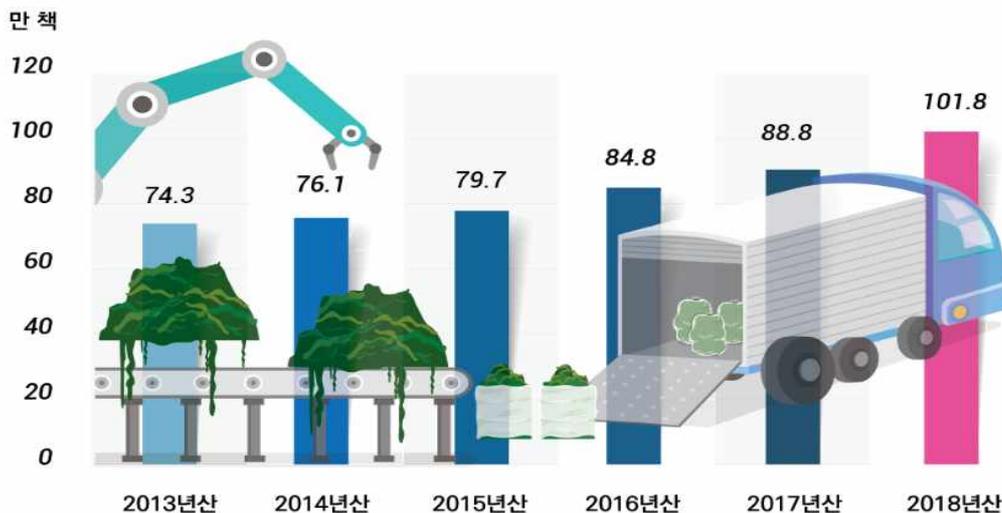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김 과잉생산, 큰 폭의 시설량 증가가 주원인

■ 2018년산 김 시설량, 수출 호황 영향으로 작년산보다 15% 증가

- 2018년산 김 시설량은 101만 8,438척으로 작년산에 비해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 활성화로 김 양식면허의 신규발급이 많았고, 2017년산 김 가격이 어기 내내 평년보다 매우 높게 형성되면서 양식어가에서 수익성 증대를 기대해 시설을 늘렸기 때문임

그림 3. 연산별 김 시설 현황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시설이 작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인천·경기의 시설 증가폭이 가장 컸음. 충남의 경우 황백화 피해가 2018년산 어기 초부터 발생하면서 시설 일부를 철거해 작년산 대비 시설이 3.1% 감소했음

- 전체 김 시설 가운데 전남이 76만 4,000책으로 전체의 75.0%를 차지했으며, 전북 10.5%, 충남 7.4%, 인천·경기 5.0%, 부산 2.2% 순이었음

표 2. 지역별 김 시설동향(전국)

(단위: 만 책, %)

구분	전국	전남	전북	충남	부산	인천·경기
2017년산 (점유율)	88.8 (100.0)	66.1 (74.4)	9.1 (10.2)	7.7 (8.7)	1.9 (2.1)	4.0 (4.5)
2018년산 (점유율)	101.8 (100.0)	76.4 (75.0)	10.7 (10.5)	7.5 (7.4)	2.2 (2.2)	5.1 (5.0)
증감률	14.7	15.6	17.9	-3.1	13.2	28.3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불법 양식시설, 김 과잉 생산을 가중시켜

- 정부의 김 수급정책은 양식면허를 기반으로 수립되므로 불법시설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며, 과잉생산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17-2018 양식어장 영상판독사업’⁴⁾ 결과를 살펴보면, 판독대상지 16개 시군구 가운데 12개 시군구에서 김 양식 시설이 판독되었음. 해당 지역에서 판독된 시설은 작년 대비 17.1% 증가한 92만 4,544책이었으며, 전국 김 시설(101만 8,438책)의 90.8%를 차지했음
- 판독대상지의 김 양식어장 가운데 준법시설은 59만 6,710책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했으며, 초과시설과 면허지외(이탈, 무면허)시설을 포함하는 불법시설은 32만 8,734책으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음

표 3. 김 시설동향(2017-2018 양식어장 영상판독 판독결과_12개 시군구)

(단위: 책, %)

구분	실제시설량 (A)	면허지내 시설량		면허지외 시설량 (C)	불법시설량 (B)+(C)	불법시설 비율 ((B)+(C))/(A)
		준법시설량	초과시설량(B)			
2017년	789,273	517,810	13,557	257,906	271,463	34.4
2018년	924,544	596,710	16,743	311,091	327,834	35.5
증감률	17.1	15.2	23.5	20.6	20.8	1.1%p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4) KMI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관측대상품목의 양식시설량 산출 및 생산량 추정을 위해 2004년부터 양식어장 영상판독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해당 사업 결과는 양식수산물 수급 안정화 자료,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어장정비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2017-2018 양식어장 영상판독사업은 16개 시군구(태안군, 서천군, 군산시, 신안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고흥군, 여수시, 고성군, 통영시, 창원시, 거제시, 부산 강서구, 부산 사하구), 7품목(김, 미역, 전복, 어류, 굴, 홍합, 멧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전체 김 시설 대비 불법시설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여수시, 고흥군, 진도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시군구의 불법시설 비중은 작년에 비해 증가했음. 태안군이 61.7%로 가장 높았으며, 완도군, 부산 강서구, 서천 등이 상대적으로 불법시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와 지자체가 어장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김 양식시설의 준법시설과 불법시설의 비중은 크게 변함이 없으며, 불법시설량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림 4. 지역별 김 불법시설 비중(2017-2018 양식어장 영상판독 결과)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2019년산 김 생산, 시설 증가로 과잉생산 우려

■ 김 양식어가, 2019년산 시설 증대 의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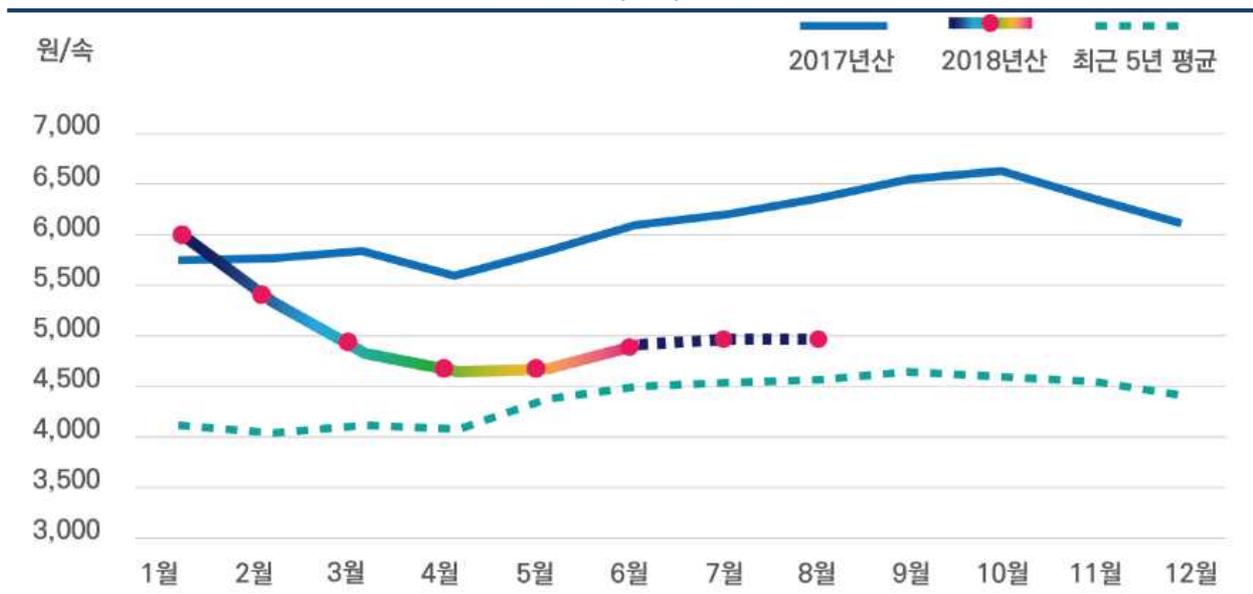
- 2018년산 김의 과잉생산으로 수급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나 양식어가들은 2019년산에도 시설을 증대시키려는 의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18년산 여기동안 물김 산지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임
- 2018년산 평균 물김 산지가격은 kg당 1,074원이었음. 생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17년산에 비해 2.6%밖에 하락하지 않았으며, 평년에 비해서는 25.2% 높은 수준이었음
- 큰 폭의 생산증가에도 여기동안 산지가격이 높게 유지된 것은 대형 마른김 업체들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원료 확보를 위한 매수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임

- 김은 작황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동되기 때문에 시설량 증대가 반드시 생산량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음. 그러나 2019년산 김 종자가격이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2019년산 김 생산도 과잉될 우려가 있음
- 높은 재고 수준이 유지되는 가운데 2019년산 양식시설 증가로 또 다시 김이 과잉생산 된다면, 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생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김 수급불균형, 도매가격에서 지속적인 이상 신호 나타나

- 2018년산 물김 산지가격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된 반면 도매가격은 2018년 2월부터 작년보다 매우 낮게 형성되면서 이상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음
-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현재 적체되어있는 재고가 햇김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11월 이전까지 일정 부분 소진되지 못할 경우 도매가격뿐 아니라 산지가격 하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또한 과거 경험에 비추어볼 때 과잉생산에 의한 재고 해소 및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2019년산 김 생산마저 큰 폭으로 늘어난다면 회복 시간이 더 길어 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5. 김밥용 김(중품) 도매가격 추이



주 : 마른김 중품(中品, 230~240g) 가격임. 2018년 6월은 잠정치이며, 7~8월은 추정치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전국 전통시장 조사가격

■ 금년 하반기 수출, 작년 수준의 큰 폭 성장 기대하기 어려워

- 시장 내 재고 증가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했고, 2019년산 김도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수출 여건도 작년보다 좋지 못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작년 수준의 큰 폭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2018년산 물김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국내산 제품의 원가가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하락되었음
- 또한 2017년 김 수출은 중국과 일본의 김 생산 및 작황 부진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전년에 비해 큰 폭(23.7%)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에는 양 국가의 생산 및 작황이 회복됨에 따라 국내산 김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2018년산 마른김 공판량은 작황 회복과 양식시설 증대의 영향으로 작년산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4,471만 숙을 기록했으며, 공급증가의 영향으로 공판가격은 작년보다 50.4% 낮은 속당 34.1위안(한화 5,733원)에 거래되었음

표 4. 중국의 연도별 마른김 공판실적 동향

(단위: 만 숙, 위안/숙, %)

구분	평년 (A)	2016년산	2017년산 (B)	2018년산 (C)	증감률	
					(C)/(B)	(C)/(A)
공판량	4,149	3,299	2,191	4,471	104.1	7.8
공판가격	31.5	31.7	68.8	34.1	-50.4	8.4

자료 : 중국 강소성 해태협회

- 일본의 2018년산 김 공판량은 작년 수준인 7,545만 숙이었으나, 평균 공판가격은 작년보다 9.1% 낮은 속당 1,188엔(한화 11,926원)에 형성되었음. 특히 한국산 김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저가의 하품 거래가 많았음

표 5. 일본의 연도별 마른김 공판실적 동향

(단위: 만 숙, 엔/숙, %)

구분	2016년산	2017년산 (A)	2018년산 (B)	증감률 (B)/(A)
공판량	7,440	7,538	7,545	0.1
공판가격	1,151	1,307	1,188	-9.1

자료 : 일본 해태저널

김 과잉생산 방지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불법 양식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김 생산기반 조성

- 불법시설은 과잉생산을 가중시키며, 양식면허(준법시설)를 기준으로 수립되는 정부와 지자체의 수산양식분야 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매년 어장정비사업을 통해 불법시설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으나, 김 양식은 여전히 그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는 최근 김 수출 활성화로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양식어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늘렸기 때문임. 또한 불법 양식시설을 제도권으로 진입시킴으로써 양성화시켜준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가 일반화 고착화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임
- 정부는 김 수급정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양식시설을 근절시켜야하지만, 김 생산자와의 갈등으로 다수의 어려움이 상존함. 불법 양식시설로 인한 과잉생산은 수익성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양식어업인들은 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한편 홍수조절, 환경보전 등 쌀 농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 실시하고 있는 ‘논 농업 직불제(쌀 직접지불제)’처럼, 공익적인 목적의 휴어기 실시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양식 생산자들의 자율적 수급조절 필요

- 김의 과잉생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는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함. 생산자를 중심으로 하는 ‘(가칭)김 수급조절 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부, 전문기관, 김 산업 종사자(종자, 가공업체 등) 등이 단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업계에서 김 수급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함
- 과잉생산으로 김 재고가 평년보다 많은 수준이 지속된다면, ‘(가칭)김 수급조절 위원회’를 중심으로 어기 단축, 양식시설 조정, 불법시설 철거 등의 수급조절 방안에 대해 생산자 스스로 자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함
- 정부에서는 생산자 스스로 김 수급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함. 또한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김 목표생산량 제도에 대한 도입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임

■ 해외시장,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수요 확보

- 우리나라 김 산업은 해외 수요에 따라 흥망이 결정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의 김 작황에 따라 수출 증감이 좌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요 김 생산국인 중국과 일본의 김 생산, 양식시설량 변화, 작황 등 수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태국, 미국, 대만 등 주요수출 대상국의 수요 변화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누적되어 있는 재고를 소진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전략으로 주요수출대상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화된 제품개발과 맞춤형 마케팅을 실시함으로써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내 소비, 소비자 기호·특성 고려한 확대 전략 마련

- 최근 김 산업 관련 정책을 비롯해 업계의 관심은 수출 확대에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해외 수요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체되어 있는 국내 소비를 확대해 나가야함
- 업계에서는 김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양, 맛, 향 등 국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며, 1인 가구 증가, 평균소득증가 등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고, 연령별·성별 등 소비자 특성을 구분함으로써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함
-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반찬용으로 김을 많이 섭취하는데, 간식용이나 안주용으로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스낵김의 대중화가 필요함. 또한 지역축제와 ‘김맥(김+주류·음료) 시식행사’, ‘안주용 스낵김 시식행사’ 등을 연계함으로써 단기적인 국내 김 소비촉진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아울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 개발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시장 세분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마른김 등급제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들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업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업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업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업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업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업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업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업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물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생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제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물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URL: <https://www.kmi.re.kr/>